<정책공약 해설자료>

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, 산재부터 질병까지

심상정케어

- 시민의 건강을 완전 책임지는 '심상정케어'
- 문재인케어의 한계를 넘어선 대한민국 최초 '시민 건강권 구현' 프로젝트

심상정케어 ① : 건강보험 하나로 1년에 백만원까지만 부담하는 '백만원 상한제'
심상정케어 ② : 언제든 내 건강을 챙겨주는 '전국민 주치의제'
심상정케어 ③ : <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>

1. 왜 심상정케어가 필요한가?

(1) 한국시민들의 의료불안

- <201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>에 의하면(2020년 발표), 우리나라에서 100가구당 81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고, 가구당 보험개수는 5.2개, 평균 보험료는 월 32만원에 달함
- 2011년에 비해 가입률은 76%에서 81%로, 가입개수는 4.7개에서 5.2개로 계속 증가
- 시민들이 민간의료보험에 낸 보험료만 2018년에 약 53.1조원로 추정
- 국민건강보험에 노사, 지역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 55.0조원과 거의 같은 금액
- 일상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주치의제도가 없음으로 인해 2019년 국민 1인당 1인당 의사방문횟수 17회로 OECD 회원국에서 가장 많음. OECD 평균 6.8회에 비해 2.5배 높음. 의료쇼핑과 과잉의료.

(2) <문재인 케어>의 한계

- 문재인 대통령은 "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"며 문재인케어를 추진했으나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 62.6%에서 64.2%로 1.6%P 오르는데 그쳐. 중증질환에선 보장성이 81%로 올랐으나 여전히 간병비 등 제외
- 문재인케어는 보장성의 획기적 확대를 주창했으나 구멍이 너무 큼. '비급여의 급여화'를 추진하면서 새로 '예비급여(혹은 선별급여)'를 만들어 환자 본인에게 30-90%의 부담
- '본인부담상한제'가 운영되고 있으나 건강보험 급여 진료에 한해 적용되어 한계

- ‘재난적의료비지원제’도 중위소득 100% 이하 계층에 한정[1)]

(3) 이것은 왜 산재가 아니란 말인가?

- 프리랜서, 플랫폼, 자영업자 등 일하는 시민 다수가 산재보험 미적용
- IT노동자의 거북목, 마트노동자의 근골격 질환, 농어민의 허리부상 등 대부분이 산재가 아닌 골병으로 취급되고 있음
- 대부분의 업무상 질병과 부상이 산재가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면서 국민건강문제 및 건강보험 적자 발생
- 2020년 영국의 업무 관련 질병 건수는 160만 건이지만, 우리나라는 2019년 15,195명으로 한국이 100배 건강한 것이 아니라 100배 만큼 업무상 질병 등이 은폐되고 있는 것임
- 복잡한 산재신청 과정과 까다로운 승인절차로 인해 대부분의 부상과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

(4) 정책공약

심상정케어① : 건강보험 하나로,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

- 어떤 질병과 치료든 모든 국민에게 1년 의료비 완전 백만원 상한제를 적용
- 서구 복지국가 대부분이 연 의료비 100만원 정도에서 상한을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도 연수입의 2%를 상한으로 하고 있음
- <심상정케어>의 ‘백만원 상한제’는 의학적 성격의 모든 치료를 포괄. 성형, 미용 등을 제외하고 의학적 목적의 진료라면 현행 예비급여, 비급여까지 적용

심상정케어② : 전국민 주치의 제도

- 출범 즉시 “주치의 도입 5개년 계획”을 통해 주치의특별법 제정
- 주치의 인력을 양성을 위해 현행 ‘전문의 중심’ 의사인력체계를 일차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모든 의과대학에 주치의 수련과정을 설치
- 주치의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환자등록기반(진료행위가 아니라 담당 환자 숫자에 따라) 지불제도 도입. 인구가 적은 지역도 주치의 있도록 지역별 가산제도 적용하여 전국 어디든 주치의제도가 운영되도록 지원
- 인구 100만명 규모의 ‘주치의도시 시범사업’을 시행하고 이후 5년에 걸쳐 전국으로 확산

---

1) 올해 11월부터 지원금이 본인부담금(예비급여+비급여, 간병비 제외)의 50%에서 소득수준별로 50~80%로 상향되고 지원액 상한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개선했지만 여전히 고액진료비 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는 못함

심상정케어③ : <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>

- 플랫폼, 특수고용, 프리랜서, 자영업자 등 모든 시민에게 산재보험 적용
- 질병이나 부상시 의료기관이 우선 진료 후 향후 별도의 산재신청 과정 등 없이 의료기관이 알아서 산재보험기금 등에 청구하는 선보장-후평가 시스템으로 전환(원스톱 산재보험)
- 상병수당 도입(소득의 70% 보전)
- 사업장 산재가 적을수록 산재보험료를 적게 내는 차등보험료제도를 균등보험료제도로 전환하여 산재은폐 일소
- 근로복지공단을 '노동건강복지공단'으로 확대개편